"박 대통령, 스스로 사임할 기회도 놓쳤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헌법재판소 결론 국민 예상하는 쪽으로 나와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스스로 사임할 기회도 놓쳤다"고 말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전에 사임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늦었다는 것.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이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은 2016년 12월9일 오후 7시3분 이후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의 하야,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정말 단 하루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박 대통령이 사직원을 내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국회법 제134조 2항은 '소추의 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조문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취지다. 대통령이 권한행사를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했고, 아울러 법률질서도 어지럽혔다.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돼있다. 이를 국회법 제134조 2항과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은 9일 이후로는 사직원을 낼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탄핵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순수한 의미의 사법기관이나 정치기관이 아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은 주권자인 국민이 예상하는 쪽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감사원의 고발과 관련해 "명색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전북교육감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면서 "감사 때는 '별거 아니다, 표적감사 아니다'라던 감사원이 결과적으로 표적감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만약 내가 인사비리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기관장 중에 인사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이번 표적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혁신교육특구 지정

진로체험 등 7억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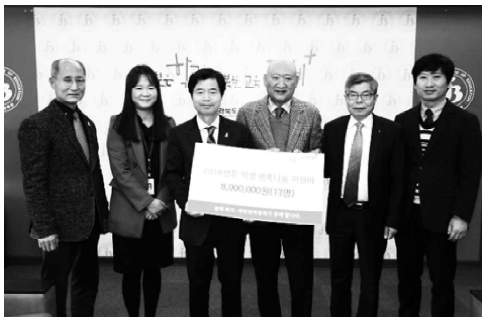
전북도교육청과 익산시가 7억원을 투자, 2017년 1월부터 2년간 익산 혁신교육특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혁신교육특구는 전주 정읍 남원 완주 등에 이어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1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익산시가 5억원, 전북교육청이 2억원 등 총7억원을 공동 투자해 익산진로체험학교, 솜리골 방과후학교 등 16개 사업에 펼치는 익산혁신교육특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교육특구 지정은 익산시가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과 익산시는 내년부터 2년간 마을교육공동체 등 4개 과제, 16개 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을교육공동체 분야에서 ▲익산진로체험학교 ▲솜리골 마을학교 ▲솜리골 방과후학교 ▲원도심학교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교육 등 6개 사업을 펼친다.

또 익산문화유산 교육과정, 문예체교육 활성화, 학생동아리 지원 등 지역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익산학교혁신모델, 수업혁신, 교사연구회, 학습공동체 지원 등 학교 혁신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같은 익산혁신교육특구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등은 '익산혁신교육특구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을 총괄하고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사업에 나서게 된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혁신교육특구 지정은 익산교육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합심해 익산교육의 성장과 혁신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 전북도 학생 행복나눔사업 장학금 전달

전라북도교육청은 14일 오전 도교육청 5층 접견실에서 김승환 도교육감과 대한결핵협회 김공수 전북지부 지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행복나눔 지원 사업을 통한 장학금 전달식 및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이와 더불어 김승환 교육감은 대한결핵협회의 결핵 퇴치를 위한 봉사와 모금 활동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전라북도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결핵협회에서는 2013년부터 학교 결핵환자 대상으로 결핵완치율 제고 및 2차 결핵으로의 악화 예방을 위해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전북 학생 중 결핵 환자 13명에게 총 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16년 크리스마스 씰 도안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10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학생 행복나눔 지원, 결핵환자 및 결핵 후유증 환자 보호시설 지원, 의료취약계층 대상 검진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2017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 검진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적 보호 못받는 문화재 관리 최선

익산시 내 비지정 문화재 148개소 목록화

익산시는 익산지역 내 역사·문화적 가치는 있지만 법·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지정 문화재의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해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화유산이 곳곳에 있다.

일부는 관심 부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소멸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어 시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이번 비지정 문화재 학술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지난 4월부터 11월 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익산에는 총 148개소의 비지정문화재가 확인됐다.

향교, 서원·사우, 사팔 부속건물, 재실, 누정, 정려각, 가옥 등 목조건축물 90개소, 근대기 관사나 교회, 교사, 상가 등 근대건축물 26개소, 성곽을 포함한 비석 등 석조문화재 24개소 이외의 기타유적 8건이 조사 기록됐다.

이중 함열향교·익산향교·여산향교 명륜당, 송림사의 우화루·정혜원·영원전, 여산면 제남리 소재 여산송씨 열려정려각, 왕궁면 용화리 정경부인왕씨묘비 등은 도 지정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향토유적 지정가치가 있는 유산은 31개소가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이번 조사된 익산시 비지정 문화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목록을 재정비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에 포함해 보존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북도내 절반 초등학교 23일 겨울방학 '시작'

전북도내 초등학교 절반이 23일 겨울방학을 시작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번 달 23일 도내 417개 초등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203개 초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82개 초등학교는 27일 겨울방학을 한다. 중학교는 27일부터 30일까지 209개 학교 중 171개 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가며 고등학교도 이 기간에 133개 학교 중 112개 학교가 방학에 돌입한다. 겨울방학 기간은 대략 40일 가량이다. 방학을 마치는 시업식은 초등학교의 경우, 2월 1일 188개 학교, 2월 6일이 140개 학교로 가장 많다.

군산시, 내년 4개교에 친환경 명상 숲 조성

군산시 대야남초등학교와 자양·중앙중, 전북외고에 내년 명상 숲이 조성된다.

명상 숲 조성은 군산시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인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산림청 국비와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7년 2억4천만 원을 투입해 학교 명상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내년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사업 공모 학교 중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대야남초, 자양·중앙중, 전북외고 등 4개교다.

시는 학교의 나대지 공간을 자연학습원, 쉼터, 미래 숲 등으로 조성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체험 학습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후관리 참여를 위한 명상 숲 조성 추진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